

紙上에서 誌上으로



친환경 바이어 66%

“인증 못미더워 자체검사 실시”

- 홍보부 -

생 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업체 친환경 담당 바이어들은 친환경을 둘러싼 제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매일경제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몰과 로드숍의 친환경 제품 바이어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유통업체 바이어들은 입점업체 선정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인 25명이 정부 인증을 선정 기준으로 한다고 대답했다. 입점업체의 공신력을 꼽은 사람은 18명(37%)이었고 23개가 난립하고 있는 민간 기관 인증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답은 2명에 그쳤다.

검증기관의 검증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4명만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고 83%인 40명이 신뢰하는 편, 나머지 4명이 매우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증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는 별개로 바이어들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자체검사 등 사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를 한다는 응답이 32명(66%)으로 하지 않는다 16명의 두 배에 달했다.

또 친환경 상품 유통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절반가량인 22명이 식품 안전성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인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정부 인증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친환경 상품 관련 정보 숙지 여부에 대해서도 11명(23%)만이 매우 잘 안다고 대답한 반면 27명이 조금 안다, 7명은 그저 그렇다, 심지어 3명은 잘 모른다고 대답해 유통업체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한편 시판중인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70%인 34명이 신뢰하는 편, 4명은 매우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대답은 10명이었다.

국산과 수입 친환경 상품의 품질을 묻는 질문에는 국산이 낫다는 대답이 21명, 비슷하다는 대답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이 낫다는 대답은 6명. 친환경 상품 유통의 현안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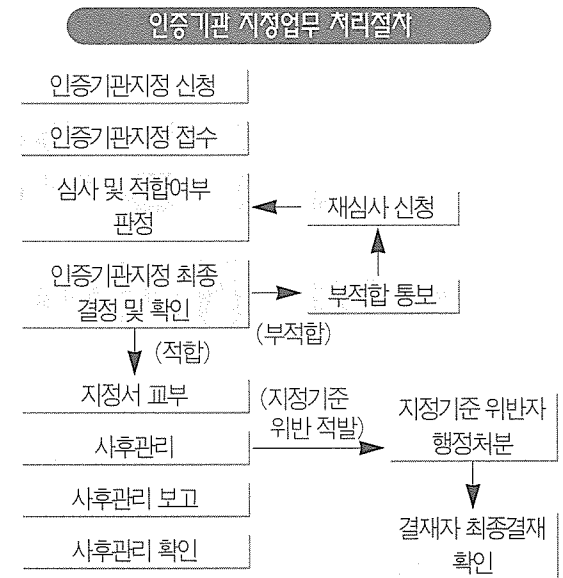
인증 문제 외에도 8명이 가격구조를, 6명이 생산체계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없다, 안정적 생산량 및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전문도 매시장이 없다 등의 대답도 나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후 유통과정서 변질도 많아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정부지원요? 없어요. 농관원은 감독을 빙자한 간섭만 하지 눈에 보이는 지원은 안 해줘요. 국민 먹을거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이 일도 못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과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정부지원금 부재와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간기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전에 이 같은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진행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는 부분은 정부지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기관인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은 다투고 골리앗에 비유될 수 있다”며 “정부지원금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에 대



한 신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85%를 인증했다. 그러나 민간 인증기관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정부가 민간 인증기관을 육성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거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며 지원에 소홀했던 결과다.

결국 농관원도 인력부족으로 인증 능력에 의혹을 받고 있고, 민간기관들에도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는 건당 3만원, 인증기간연장 수수료는 건당 1만5000원으로 인증기관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몇 억원에 달하는 고가 검사장비 도입은 생각도 못하는 기관이 많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통·가공관리 부재.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생산과 인증을 거쳐도 유통이나 가공과정에서 변질되면 그 책임은 생산자가 진다”며

“생산 이후 유통 단계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한국 친환경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성분분석 중심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친환경농업인의 농업철학과 농법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증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친환경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비친환경 농가들과 인접한 경작지가 많아 비나 바람 등에 의해 농약 등의 성분이 전이될 수 있다. 또 토양이 수십 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돼 왔기 때문에 유기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토양에서도 이 같은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축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축 사료에 항생제나 농약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백개 농가의 유기농 검사 1명이 처리...제대로 되겠나”

“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나 민간 기관이나 모두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한 명이 몇 백 농가 인증을 다 담당한다고 생각해보요. 게다가 몇 억원씩 정밀검사하는 기계 갖춘 곳이 몇이나 되겠어요? 간이검사기계 놔두고 검사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솔직히 오류가 많이 나

는 게 사실이에요.”(경남지역 친환경농업인 J씨)

“농관원 인증받을 때 서류도 복잡하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 봐요. 나중에 점검도 나오고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검사장비도 제대로 없더라는 말이지. 물어볼 때 우리가 답하면 그대로 통



과되는 거야.”(전남지역 친환경농업인 O씨)

“장기적으로는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 업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비나 인력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우리도 완전히 믿고 넘기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농관원 고위 관계자)

“오히려 민간 인증기관이 정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명이 인증절차를 담당하는 농관원과 달리 민간 기관에서는 담당자 외에 전문적 지식과 철학을 가진 인사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까지 거쳐야 합니다.”(민간 인증기관 관계자)

“문제는 유통과 가공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생산하고 정확히 인증해도 유통과 가공 단계에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산자와 인증자가 져야 한다는 게 불합리합니다.”(민간 인증기관 관계자 Y씨)

친환경 농산물로 등록돼 판매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과정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인증절차를 맡은 기관의 공신력은 어떨까. 현재 국내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23개 민간 기관이 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 대부분은 농관원에 의해 이뤄진다.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8717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이뤄졌다. 이 중 농관원의 인증건수는 7367건으로 전체 중 약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는 아직 충분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은 담당 지역만 맡으면 되지만 민간 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때로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인증과정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인 J씨는 “철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해서 바로 인증을 내주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민간 기관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농가에 대해 대규모로 인증을 내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 농법을 시행한 농가들이 그렇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이다. 한 민간 인증기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주체로 운영되다 보니 장비나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정밀분석기계 등의 장비를 갖추려면 억대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상당수 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당수 기관은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도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민간 기관들은 “민간 인증기관을 불신하기 전에 민간 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정부가 믿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건당 3만원씩 받는 인증수수료로는 기관 운영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증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나친 수수료 인상은 자칫 농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6.07.09 매일경제>. Y